

## 환경 규제정책 적극적 대응할 터 회원사 수요개발, 협회 안정 구축 계획



석용찬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회장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는 지난 2월 24일 제10회 정기총회를 갖고, 협회명을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로 개명, 전회원사 대표들의 추대로 제4대 회장에 (주)화남인더스트리 석용찬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중책을 맡겨주신데 회원사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플라스틱

포장용기협회는 지난 9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제반사정으로 인해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협회 명칭과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을 계기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회원사 상호이익을 위한 수요개발과 협회 안정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제반사항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987년 경기도 남양주에 화남화학(주)을 설립하면서 플라스틱 업계에 몸을 담은 석용찬 회장은 대외적으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환경분과위원장과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부회장 등 업계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재활용 체계 구축에 주력하는

등 업계 현안 및 중소기업의 지위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또한 경기도 파주시 기업인협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창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지난 95년 창립된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는 설립후 9여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 협회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 게다가 2002년 8월 탄생한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의 영향으로 재활용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플라스틱재활용 관련 업무를 리사이클링협회로 이관하는 등 단체의 입지가 약화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환경정책에 맞대응하는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랐을 터.

석용찬 회장은 철저하게 포장용기 생산자 단체인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로 재탄생한 만큼 협회는 환경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플라스틱포장용기 생산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플라스틱에 대한 무분별한 환경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폐해와 편익이 공존하며 자체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환경 및 폐기물 관련 법률은 전체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특정 재질, 특정 아이템을 규제함으로써 업계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성수지가 20세기 소재산업의 일대 혁명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미 합성수지의 사용을 중지시킬만한 힘이 인류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의 절대적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 환경부와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의 EPR 대상품목 선정 ▲ 재활용의무총량 산정 및 재활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감시와 개선책 강구 ▲ 자원재생공사의 폐기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합리적인 협력방안 모색 ▲ 합성수지 원료사와의 원료 공동 구매 사업 추진 및 협력 강화 ▲ 분해성 플라스틱 등 신소재에 대한 정부 공유 및 공동기술 개발사업 추진 ▲ 규제대상 플라스틱 제품 전반에 관한 로드맵 요구 등 환경부와 합리적 타결책 강구 ▲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와 협력하여 플라스틱의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재활용 현황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적극 추진 ▲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LCA(전과정) 평가 및 규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용역)추진 등 다양한 목표를 두고 위상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석용찬 회장은 협회 사무국을 재정립함으로써 회원사간의 유대관계 정립에 주력하고 의견을 결집, 공동이익을 위해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보다는 공동의 선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회원사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싶다”고 밝히는 석용찬 회장.

플라스틱에 대한 정부 규제와 업계간의 싸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현재, 재탄생한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석용찬 회장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K]

박초혜 기자